

격월간

정세와 동향

제4호

[2012_10_08]

모심의 살림의 노 길

이슈 진단

반복되는 식량위기와 농업살림 운동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살림의 말

한살림,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



모심과살림연구소

- 목 차 -

이슈 진단

- 반복되는 식량위기와 농업살림 운동 1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생명의 먹거리를 지키는 국제행동의 날, '10월 16일' 10
- 안전한 먹거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협의 역할 재조명 13
-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음식 사막화' 현상 14
- 공동체 토지신탁 운동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의미 16
- 먹거리의 기본인 '씨앗'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17

[경제·생활]

- 0세 보육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20
- 생협전국협의회 구성 및 활동 소식 21
- '프리미엄' 유기농 매장의 차별화, 고급화 전략이 주는 의미 22

[사회·환경]

- GMO 관련 과학계의 실험과 안전성 논란 및 과제 23
- 일본 생활클럽생협연합회의 '방사능 자주기준' 설정과 운영 24
- 생수 시장의 과열과 물 기본권에 대한 위협 26

[정치·사회운동]

- 원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핵운동 27
- 두물머리의 갈등 해결과 남은 과제 29
- 귀농에서 협동조합까지, 청년들의 새로운 모색 30
- 2012 생명평화대행진, 생명운동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까 31

살림의 말

- 한살림,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 33

이슈 진단

반복되는 식량위기와 농업살림 운동

● 곡물가 폭등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 올해 들어 미국 등 주요 곡창지대에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이것이 일반 물가에 영향을 주는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 + inflation)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 국제 곡물수급의 불안으로 2007~08년에 곡물가가 폭등한 바 있고, 2010년 러시아 등의 이상기후로 2011년 중반까지 곡물가가 급등하였는데, 1년 만에 다시 이상기후와 작황 부진으로 옥수수, 콩, 밀 등 3대 주요 작물의 가격이 폭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옥수수, 콩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평년 강수량의 60% 밖에 되지 않는 50여 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데다,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도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재고량이 25년 만에 최저 상태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올해 7~8월 밀, 옥수수, 대두의 평균 가격은 작년 4분기 대비 각각 41.6%, 27.5%, 4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옥수수, 콩, 밀 등 3대 주요 작물의 가격 폭등은 가공식품 가격은 물론 사료값과 축산물 가격도 동반 상승시켜 결국 밥상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최근의 곡물가 폭등 사태는 예전보다 더욱 심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최근 들어 곡물가격 급등 현상의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음.
-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1970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 곡물파동이 일어났는데, 2008년 이전까지는 7~12년 주기로 4차례 일어난 반면, 나머지 3차례는 지난 5년 사이(2007~08년, 2010~11년, 2012년 현재)에 발생하였음.
- 곡물가격의 변동 폭도 점점 커지고 있음.
- 곡물가격이 오를 때는 50% 이상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지난 10년간 국제곡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두 배 이상 올랐음.
- 여기에는 곡물가격 폭등과 식량위기의 주요 원인이 기존의 생산(공급) 영역에서 소비(수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곡물가격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경제 논리가 잘 적용되지 않는 데다, 곡물시장의 가격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
- 1970년에서 2000년까지 30년 동안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2배가량 늘어났으나, 소비의 증가율이 생산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9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세계 곡물 생산량은 21.5% 증가한 반면 소비는 27.1% 증가하였음. 국제 곡물재고율도 1998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임.
- 곡물가격 폭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음.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부진 외에 바이오연료, 투기자본 등 정치, 경제적 요인들도 곡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식량위기와 곡물가 폭등 문제가 점점 더 광역화, 장기화, 구조화되고 있다

- 식량생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폭등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식량수급에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더라도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함.
- 환경 등 재난적 요인으로 식량생산 기반 자체가 파괴되었을 경우 예전 수준으로 생산량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식량은 대체재가 없어 식량 수출국이라도 자국 소비 충족을 우선하고 잉여생산물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 불균형의 발생 폭이 클 수밖에 없음. 세계 곡물생산량에서 10~20%가 수출되고 있음.
- 식량의 생산과 수출 부문에 존재하는 독점적 구조 또한 식량가격 폭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세계 곡물생산량에서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90% 수준임. 2009년 기준 생산량은 콩 91.8%, 옥수수 77.1%, 쌀 72.2%, 밀 66.7%임.
- 수출량 중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70~90%를 넘어섬. 2009년 기준 수출량은 콩 98.1%, 옥수수 89.1%(미국이 53.5%), 쌀 81.3%, 밀 72.6%임.
- 특히 식량수출 및 수입이 특정 국가, 특정 기업, 특정 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음.
-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이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세계 곡물가가 폭등한 이번 경험에서 보듯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식량수급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음.

- 카길(Cargill)을 비롯한 4대 곡물메이저 회사들이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 곡물 저장시설의 75%, 운송을 위한 항만시설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 인공위성을 운영해 세계 곡물작황을 분석하고 선물(先物) 시장에 개입하는 등 세계 곡물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세계 5번째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수입량의 60% 정도(2008년 기준 콩 65.8%, 옥수수 62.4%, 밀 58.4%)를 이들 곡물메이저 회사에 의존하고 있음.
- 미국발 세계 곡물파동의 원인이 옥수수인데, 문제의 심각성은 옥수수라는 단일 품종에 우리의 식탁과 생활 전반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임. 옥수수의 생산 규모는 밀이나 쌀보다 20% 더 많으며, 슈퍼마켓에 진열된 식품의 75%(가공식품 1500여 개 중 1300개 정도)에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어, 현대 식품사슬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입국으로, 수입 옥수수의 75% 이상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옥수수의 생산량과 가격변동이 미치는 영향의 폭과 정도는 매우 클 수밖에 없음.

● 경제, 사회, 환경, 생활양식의 빠른 변화도 곡물 소비량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 소득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육류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식용 외에 사료용 곡물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율을 유지해 온 중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1985년 20kg에서 현재 50kg으로 크게 늘어남.
- 쌀을 주식으로 해 온 우리나라의 식생활 패턴도 크게 변하여, 쌀 소비는 줄어들고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남.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에 136.4kg에서 2010년에는 72.8kg으로 약 절반 가량 줄어듦. 밥 1그릇의 쌀을 120~130g으로 보면, 1970년에 하루 3.7~4.0그릇을 소비하던 것이 2010년에는 약 1.6~1.7 그릇으로 줄어든 것임.
- 반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1970년에 5.2kg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38.8kg로 7.5배 증가하였음.
- 이런 가운데 곡물 수입량도 지난 30년 동안 크게 늘어나, 옥수수는 28만4천 톤에서 905만9천 톤으로, 밀은 123만4천 톤에서 387만8천 톤으로, 콩은 3만6천 톤에서 146만9천 톤으로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였음.

- 바이오 연료 생산에 옥수수, 대두 등 곡물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식량위기를 촉발시키고 있음.

-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 제정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옥수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량이 2004~05년도 3,120만 톤에서 2008~09년도 1억 400만 톤으로 급속히 증가해 옴.
-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중 가축용 사료로 38.7%, 바이오 연료로 36.5%, 수출로 14.5%로 사용되고, 자국의 식품 소비로 10.1%, 종자로 0.2%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식량위기 사태가 재현되면서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유엔은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 1을 에탄올 생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한 미국의 신재생 연료 의무혼합제도(RFS)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 즉 '핫 머니'가 곡물시장에 개입하여 곡물가 폭등과 식량위기를 부추기고 있음.

- 곡물가격의 불안정이 투기자본을 곡물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이것이 다시 가격 불안정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발생시킴. 가격 안정성보다 불안정성을 통한 시세차익을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 투기자본은 가격변동의 폭이 큰 곡물시장을 선호하고 있음.
- 2007~08년 곡물파동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금리인하 조치(2007년 5%에서 2010년 0~0.25%)로 유동성 자금이 곡물시장에 개입하면서 큰 영향을 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관련 선물 거래에서 실제 농산물 거래는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금융자본"이라고 밝힘.
- 최근에는 금융위기가 유럽을 덮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글로벌 투기자본이 이상기후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곡물시장에 개입해 가격 상승을 부추김.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식량 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기상이변은 고온이나 저온, 가뭄과 태풍, 폭우, 일조량 변화 등으로 농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급격한 강수량의 변화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을 저하시키고, 온난화로 작물 재배 적합 지역을 바꾸고 새로운 병해충을 발생시키는 등 농업 생산 전반에 총체적인 영향을 줌.
- 2009년 영국 신문 옵서버가 공개한 미국의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나 이념, 민족주의가 지금까지의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었다면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증가 또한 식량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세계 식량 수요량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동안 세계 인구는 1980년 44억 명에서 1990년 53억 명, 2000년 61억 명, 작년 2011년 10월 말에는 70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2050년에는 91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곡물가 폭등으로 인한 식량위기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 요인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곡물가 폭등에 따른 식량위기 사태는 경제위기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 식료품과 사료가격 폭등은 앵겔지수가 특히 높은 저개발국과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선진국은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약 20% 안팎을 차지하고 여러 단계를 거친 가공식품 소비도 높으나, 저개발국의 경우 식료품비가 가계 지출의 70~80%를 차지할 만큼 높고 식량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도 단순해서 식량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 2007~08년 때와 달리 현재는 달러화가 강세여서 곡물수입국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큰 상황인 데다,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국들의 대외 원조 역할도 위축되어 저개발국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 곡물가 폭등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이 생활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주요 곡물의 가격폭등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식료품 가격이 10% 이상 오름.
-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식량가격이 전년대비 57% 상승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33개국에서 소요사태가 예상되고, 국제적인 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국제 곡물가 상승이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수입곡물과 관련한 물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하반기까지 이어진 곡물가 폭등은 내년 3, 4월에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식량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세계 각국이 농업 보호주의를 강화할 경우 식량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 및 지역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음.
- 2007~08년 세계 식량위기 때 카메룬,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세계 30여 개 국가

에서 식량관련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특히 13억이 넘는 인구 대국 이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해 온 중국에서 자원민족주의를 식량 분야로 확대할 경우 세계 곡물시장은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사막화로 농지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이농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식량자급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농지의 절대면적과 1인당 수확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왔음.

- 지난 10년 동안 개발 등의 이유로 제주도 면적(18만 5천 ha)만한 농경지가 사라짐. 올 상반기에도 서울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7천ha가 전용되었음. 경작 포기 농지도 매년 5만ha에 달함.
- 연평균 경지면적 감소율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 2000~05년에 경지면적 감소율이 0.65%이었던 것이 2006~11년에는 1.23%로 더 높아짐.
- 단위 면적당(ha) 곡물 수확량 증가율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1970~80년 사이에 2.00%, 1980~90년 사이에 1.64%, 1990~2000년 사이에는 1.32%로 줄어들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주요 작물의 품종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 곡물보다 고소득의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로 바뀌고 있음.
- 한편, 전체 곡물공급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9.9%이던 것이 1990년 50.3%, 2000년 64.7%, 2010년 66.5%로 계속 커져옴.

- 우리나라는 식량자급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급등하는 국제곡물 가격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

- 1960년대 90%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은 반세기 만인 작년 2011년에 2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최근 들어 곡물자급율이 더욱 떨어진 것은 전체 곡물자급율을 뒷받침하던 쌀의 자급율마저 떨어진 데 영향을 받음. 지난 10년간 100% 수준을 유지하던 쌀 자급율은 2011년에 83.0%를 기록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임.
- 작년 기준 밀 자급율은 2.2%, 옥수수는 3.3%, 콩은 22.5%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연간 1,500만톤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 상태에 있음.
- 이런 현실은 OECD 국가의 평균 곡물자급율이 11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음.

- 정부는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2006년에 처음으로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작년에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자급율 지표를 도입함.

품목	2010년	2015년		2020년
		기존	재설정	
곡물자급율 (사료용 포함)	26.7%	25%	30%	32%
식량자급율 (식용곡물)	54.9%	-	57%	60%
곡물자주율 (해외생산 곡물 포함)	27.1%	-	55%	65%
주식자급율 (쌀, 밀 + 보리)	64.6%	54%	70%	72%
칼로리자급율	50.1%	47%	52%	55%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는 해외농업개발과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곡물수입 다변화 등의 정책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 하지만 식량위기 상황의 반복적 발생과 식량민족주의의 등장 속에서 부족한 식량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상당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 정부가 내세우는 곡물자주율 지표도 결국 비교우위론을 통해 농업을 시장논리에 맡기려는 논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 대표적인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수입국으로 전락했던 점과 2008년 식량위기 사태 때 수급 불안을 경험한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곡물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던 경험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한살림의 농업살림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 지금의 곡물가 폭등은 내년 물가에도 영향을 주며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FAO는 향후 10년간의 곡물 실질가격이 이전 10년간에 비해 20%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함.
- 미 농무부는 내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이 전년 대비 2.7% 감소한 22억 4700만 톤으로 전망.
- 국제 곡물가격 변동이 수입 곡물 관련 상품의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4~7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국제곡물 가격이 연말과 내년 초 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올해 2분기 보다 내년 상반기에 밀가루는 30.8%, 전분은 16.3%, 식물성 유지는 11.2%, 사료는 10.2%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식량위기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곡물가 폭등의 원인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주요 곡물들 간의 가격 상관성이 점점 커지되면서 식량위기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하지만 지금까지는 식량가격이 급등할 때만 위기 인식을 가지다가 가격이 안정화 되면 곧 바로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해 옴. 그동안 농산물 수입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대응을 주로 해 옴으로써 식량의 생산과 소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음.
- 식량자급을 향상은 농업과 농촌이 지속가능하게 살아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농지확보, 지역순환 농업체계 구축, 농가소득 향상 등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의 전환으로 밥상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한살림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나누는 활동에 주력해 온 한살림은 그동안 전체적으로 약 1천만평의 농지를 지키고 살리는 역할을 해 옴. 하지만 아직도 이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0.2% 수준에 불과해, 농업살림운동에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살림의 농업살림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¹⁾

설문응답 조합원들은 '앞으로 기대하는 한살림의 주요 활동 모습'에 대한 2009년과 2012년의 공통 질문에 대해, '농업, 농촌을 지키는 활동'과 '협동경제 만드는 활동'에 대한 응답율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구분	2012년	2009년	증감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나누는 활동	29.1%	45.9%	-16.8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가꾸는 활동	40.5%	41.6%	-1.1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는 도농공동체 활동	35.2%	31.6%	3.6
협동의 원리로 운영되는 대안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활동	20.2%	12.9%	7.3

1)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진행한 2009년과 2012년의 한살림서울, 성남용인, 고양과주 조합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임.

- 앞의 의식조사 결과는 국내 식량자급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한살림 조합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리고 농업 살리기와 협동경제 만들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아진 인식을 고려할 때, 최근 한살림이 설립과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의 의미를 적극 살려서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은 우리 땅에서 생산된 보리로 사료를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식량자급율을 높여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사업체 모델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211개 농가가 참여해 120만평의 농지에 1800톤의 보리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편, 밥상살림, 농업살림과 관련하여 한살림이 추구해 온 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한 활동도 보다 구체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 쌀 자급율 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살림 조합원부터 우리쌀 먹기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식량자급율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은 18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 활동에도 한살림이 앞장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분야별 동향 1 농업·먹거리

● 생명의 먹거리를 지키는 국제행동의 날, '10월 16일'

- 매년 10월 16일은 생명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된 국제적 행동의 날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지정된 날 명칭	지정 주체	지정 연도
세계 식량의 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79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국제소비자기구(IOCU)	1985년
안티 맥도날드 데이	영국 그린피스	1985년
몬산토 반대의 날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시민 사회단체	2010년
反GMO의 날 (일명 반지의 날)	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2011년

- '세계 식량의 날'(유엔식량농업기구, 1979)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1945년 10월 16일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1979년 제20회 정기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의해 '세계 식량의 날'로 정식 인정받음.
- 매년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각국에서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행사를 개최.
- 2000년대 들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이 식량위기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농식품 체계의 변화를 통해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보장(food security)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강조해 옴.
-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종교계나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세계 기아 어린이 돕기 행사 등을 펼쳐 옴.

-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국제소비자기구, 1985)

-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든 국제소비자기구가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해 식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1985년에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제정함.
- 화학조미료는 1908년 일본에서 처음 맛을 돋구는 조미료로 사용한 이래 1963년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함.
- 단맛·짭맛·신맛·쓴맛의 4개의 기본 맛에 속하지 않는 지미성분(旨味成分), 즉 감칠

맛을 내기 위해 화학조미료(MSG)와 종합 조미료 등이 과다 사용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고 건강상의 피해도 나타나자 화학조미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줄여 나가자는 목소리들이 나옴.

- 화학조미료는 두통, 멀미, 열, 가슴압박감, 천식 등을 일으키며, 혈액을 산성화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특히 어린이의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짐.
-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1972년부터 영아에게 화학조미료 섭취를 금지시켰고, 어린이는 3g, 어른 6g 등으로 하루 섭취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화학조미료의 국내 생산이 시작된 60년대 중반부터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해 오다가 90년대 이후 MSG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00씨즈닝, 00분말 등 복합 조미료 사용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화학조미료 사용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따라서 MSG가 많이 들어간 패스트푸드나 냉장보관 식품을 멀리하고 친환경 재료로 직접 만들어먹는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티 맥도날드데이(Anti-Mcdonalds' Day)'(영국 그린피스, 1985)

- 패스트푸드가 생태계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동물 학대, 노동착취 문제 등을 알리기 위해 영국 그린피스가 중심이 되어 1985년에 만들어졌으며, 패스트푸드를 생산해 내는 농업, 축산업, 유통업 등 산업 전반을 세계화시킨 다국적 기업 맥도날드에 저항하는 것으로 집중함.
- 맥도날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관련 활동가들이 1992년에 맥도날드사로부터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하면서 오히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안티 패스트푸드운동의 상징이 됨.
- 맥도날드에 대한 저항은 각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됨. 서구의 경우 환경파괴와 소비자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아랍권에서는 반미운동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맥도날드사의 사은품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의 미성년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개선 문제로 나타나기도 함.
- 또한 멕시코,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인도 등에서는 전통의 문화유산 지키기 위해 맥도날드 매장 개설에 저항하기도 하였고, 프랑스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운동이 되기도 함.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연결되는 냉장 화학물을 대량 소비하는 맥도날드에 저항운동을 벌이기도 함.
-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안티 맥도날드데이에 참여해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생활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 옴. 장난감으로 어린이를 유혹하는 문제와 어린이 시간대에 광고하는 문제, 패스트푸드 원재료와 첨가물 공개 등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일정 정도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패스트푸드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몬산토 반대의 날'(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시민사회단체들, 2010)

- 2010년 나고야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석한 세계 민간단체들이 '세계 식량의 날'이자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한 10월 16일을 '몬산토 반대의 날'로 선포하고, 세계 농식품 체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먹거리 위기를 초래하는 몬산토의 문제를 지적함.
- 몬산토는 '씨앗에서부터 식탁까지' 세계의 농식품 전반을 지배하는 거대 공룡기업으로, 1971년부터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1982년 세계 최초로 식물의 유전자 조작에 성공한 바 있음.
- 몬산토는 현재 세계 유전자 변형 식품의 90%에 대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 품종의 종자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음. 자사가 개발한 유전자 조작 씨앗으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한 캐나다와 미국 농민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46개 국가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몬산토는 자연자원을 착취하고 세계 식량 체계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어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다국적 농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비아 캠페시나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지구의 친구들 같은 환경단체들은 GMO를 확대 생산하는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농기업들의 문제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1년 반지의 날(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 다국적 농기업 카길이 국내 대두유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밝힌 작년 10월, 유전자 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소속 회원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생명을 파괴하고 농업시장을 왜곡하는 GMO를 몰아내기 위해 反GMO의 날, 일명 '반지의 날'을 선포함.
- GMO 반대 생명운동연대에는 한살림, 가톨릭농민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십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GMO반대운동과 더불어 생명특허 문제, 작물 다양성, 토종종자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의 대상을 조작성분 포함가능성이 있는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GMO 관련정보의 접근가능성과 투명성보장, 우리 농촌의 미래에 대한 입장 표명과 GMO 개발 즉각 중단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주장하고 있음.
- GMO농산물은 현재 가축 사료로 많이 사용되지만 식용유와 간장, 햄,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 과자와 빵, 음료 등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 특히 포도당, 올리고당 등 식품첨가물 형태로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반지의 날(non-GMO day) 지정을 통해 유전자 조작식품의 문제점을 알리고 GMO 표시제 개정 등 제도개선 운동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 안전한 먹거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협의 역할 재조명

- 200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반면 대형 식품오염사고는 자주 일어남으로써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해 옴.
- 그동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져왔으며,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도 오히려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한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옴.
- 하지만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아, 약 80%의 시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2011년 소비자원 조사).
-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자리하게 됨.
- 이물질, 화학첨가물, 농약·항생제·중금속 등은 물론 최근에는 병원성 세균, 식품 알레르기, 방사성 물질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범위가 확장됨.
- 이런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활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음. CJ, 대상, 이마트 등 대규모 식품 업체들은 2000년대 이후 '안전한 먹거리'를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업체	프로그램, 캠페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조치 사항
롯데리아	안전먹거리 체험교실	세균과 이물질로부터 조리과정의 안전과 청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이마트	안전 안심 먹거리 제공	GAP(1%) ¹⁾ , 친환경농산물(6%) ²⁾ , HACCP 수준 위생 시설(10%) ³⁾ , 진열기한 표시제, 당일 판매제 등
농협중앙회	농협 안심 먹거리	이동식 식품안전센터를 현장에서 순회 운영,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와 신선도 검사
올가홀푸드	바른 먹거리	대부분 친환경농산물, 모든 상품 GMO 분석, 합성 착색료 · 보존료 · L-글루타민산나트륨 금지 등

참고: ¹⁾ 2009년 기준 전체농산물의 1%, ²⁾ 2009년 기준 전체농산물의 6%, ³⁾ 2011년 기준 전체 매장수의 약 10%

- 국가 차원에서도 GAP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HACCP 와 같은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원료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 생산량에 비해 인증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매년 전체 인구의 1/6 정도가 먹거리를 통해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2011년에 '식품 안전 현대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부(FDA)의 조사권과 단속권을 강화해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함.
- 하지만 먹거리 안전이 제도의 변화나 기업의 노력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만큼, 먹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생협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

- 세계의 먹거리 생산 및 공급 체계는 '장기간' 저장과 '장거리' 운송 체계에 더욱 의존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먹거리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공급자 중심의 관리정책으로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관리하는 구조여서 먹거리 안전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결국 먹거리 안전은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먹거리의 생산과 전달체계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 점에서 국가와는 별도로 자체 인증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생산자 회원들과의 상호 교류 및 신뢰 기반을 형성해 온 생협은 먹거리 안전망을 사회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자라 할 수 있음.
-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생협의 역할은 식품 소비단계에서 위해성 문제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생태계의 관계망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음.
- 즉 먹거리 문제를 식품의 위해물질과 칼로리, 영양소 문제로 제한시킬 경우 생협의 역할을 지나치게 협소화시킬 우려가 있음. 친환경농산물의 차별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세균 오염 등 위해성을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은 요소론과 환원론에 바탕한 기계론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일부 식품 기업들이 하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이 결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상품화 전략으로 활용되어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음.
- 따라서 유기적이고 전일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가지는 사회, 생태적 맥락과 생협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살림이 취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가까운 먹거리 운동,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골프장건설 반대와 방사능오염에 대한 자주기준치 마련과 탈핵 운동 등은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실천 활동으로서 사회적, 생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알려낼 필요가 있음.

●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음식 사막화'(Food Deserts) 현상²⁾

- 급속한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중심으로 '신선 식품의 공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음식 사막화'(FDs-Food Deserts, 食沙漠化)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음식 사막화는 단순히 장보기가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야채나 과일,

2) 일본 음식사막연구회(http://www18.atwiki.jp/food_deserts/)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함.

생선, 육류 등의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식료품을 살 수 없어서 영양부족이나 영양 불균형 등으로 건강에 피해를 주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음식 사막화에는 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중심 상가의 공동화,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 가구의 급증과 이웃 관계의 단절 및 빈곤 확대, 고령화로 인해 운전을 못하는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선 식료품을 살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식재료를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
- 음식 사막화는 빈곤과 사회적 격차를 통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대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 층(소수민족, 단순 노동자, 미혼모, 노인 등)에서 나타나는 암이나 심장 질환 등의 질병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음.
- 미국에는 전체의 10%가 음식 사막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흑인과 미혼모,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동 비만이 1980년 이래 3배로 증가하고, 연간 비만치료로 1500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신선식품 대신 주로 패스트 푸드를 이용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미셸 오바마는 2017년까지 전국의 음식 사막지역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에 4억달러 건강식품 기금 정책 발표함.
- 영국은 1970~90년대 중반에 중소 식품점이나 쇼핑센터가 도산으로 교외로 빠져나가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서 음식 사막 현상에 직면함.
-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음식 사막 현상이 진행되어 영양결핍과 노화가 촉진되고 질병에 저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등장함.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이웃으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음식과 건강에 관한 관심과 접근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은 삶의 기본이자 생활환경과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신선 식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은 해당 지역과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

- 현재 상태로는 음식 사막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심의 공동화 지역은 물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도시 교외지역(주택 단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비교적 긴밀한 이웃관계와 생산기반을 갖춘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도시 젊은 세대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음식 사막화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음식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골목상권과 근린 상가를 보호하고, 농민장터(farmers market)를 활성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생협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공평하게 생선, 녹황색 야채, 과일, 고기 등 양질의 다양한 신선식품 재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장과 유통체계, 식당 등의 기반을 공적인 역할로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음식 빈곤(food poverty)의 대안으로 음식 정의(food justice), 음식 접근성(food accessibi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살림이 펼치고 있는 '가까운 먹을거리' 활동도 신선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해 보고,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먹거리를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함.

● 공동체 토지신탁 운동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의미³⁾

-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상품화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토지신탁'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이하 CLT)은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주창한 '토지 공유제' 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비영리기구인 CLT가 토지를 영구적으로 소유, 관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토지 가치를 보존하고 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토지를 개인이 소유, 관리, 개발, 매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CLT에서는 토지를 공동체적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인류 공동의 유산인 토지의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것이 특징임.
- 토지 소유주 역할을 하는 CLT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마을이나 공동체에 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주택협동조합 형태를 가짐.
- CLT는 토지 임차인(CLT 주택 거주민), 지역주민,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동일한 수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주로 CLT 자산인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사는 CLT 회원들에 의해 선출됨.

- CLT는 도시지역에서는 저렴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자로, 농촌지역에서는 농지 보존을 위한 의미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CLT는 거주자 회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건물 이용권을 부여하여 비싼 임대료와 주택 가격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저렴한 주택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주택 가격(토지+건물)에서 토지 부분을 무상으로(약간의 관리비를 내기도 하지만 대략 월 3만 원 정도 수준) 임대해

3) 이 내용은 한살림 자주공부모임 '로스트'에서 지난 8월 21일 마련한 '공동체 토지신탁과 농지'에 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간사의 강연 내용과 토지+자유 비평 34호에 실린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와 공동체 토지신탁', 토지+자유 연구소 전은호 객원연구원의 글을 참고 했음.

주기 때문임. CLT들은 주로 개인과 단체의 기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초기에 필요한 토지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Burlington시 챔플레인 하우스링 트러스트는 1,500호의 아파트와 500여 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250여개, 영국에 80여개가 설립, 운영 중에 있고, 벨기에, 캐나다, 인도, 호주, 케냐 등지에서 사례가 보고되는 등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CLT가 농지 보존을 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 인디언 라인 팜(Indian Line Farm)의 경우, CLT와 환경운동 단체, 지역 임대농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농지를 보존하고 있음.
- CLT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99년간 안정적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농지가격을 안정화시켜 농부들이 유기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경운동 단체는 농지의 전용과 개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보존권(한국에는 없음)을 구매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토지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줌.
- 따라서 서민 주거 안정과 농지 보존, 생태적 자원 보호 등 토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적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CLT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주목해서 우리 사회에서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식량위기와 고령화 시대에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농지를 지키는 일이 농촌과 도시를 아울러 사회 전체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 모델로서 경험을 축적해 온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단체들이 힘을 모아 농지에 대한 신탁운동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먹거리의 기본인 '씨앗'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 지난 세기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먹거리의 기본인 농산물의 종자들이 소멸되고 먹거리 다양성이 파괴되어 옴.

- 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피 2011년 7월호에는 1903~83년 사이에 농산물 종류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콩(408->25), 옥수수(307->12), 토마토(408->79), 오이(285->16), 양배추(544->28) 등 조사된 66개 농산물의 93%가 지난 80년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경우 종자 전문가 안완식 박사에 의하면, 1985~93년까지 고창, 상주, 금릉 3개 지역의 현지 실증조사 결과, 불과 8년 사이에 74%의 작물재래종이 소멸한 것으로 나타남.

- 농작물의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 데는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

- 농작물 다양성의 파괴에는 대량생산을 위한 장려품종의 육성보급과 단작 확대, 화학비료와 시설농업의 발전, 작물다양성 확보에 필요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씨앗을 기르고 보존해온 주요 주체인 여성 생산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단절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최근에는 LED 기술과 수경재배, 자동화에 기반한 식물공장의 등장과 저비용 GMO 작물의 대량생산 확대로 자연과 유리된 인위적 농작물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협약(UPOV)의 영향력이 최근 더욱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종자를 개량하고 상품화 하는 사람들의 특허권과 재산권 행사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지역에 기반한 전통 농업과 재래종은 더욱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자본과 기술을 동원해 인위적 조합과 재배로 특정 기능을 극대화한 신품종들이 농업을 지배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재래종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들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도의 반다나 시바 박사는 최근 리우+20 회의에 참석하여 씨앗 특허권을 반대하는 '씨앗 해방'(seed freedom) 캠페인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녀가 설립한 나브단 야에서는 인도 내에 65개 종자은행 설립을 지원하여 소농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재래종을 보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음.
- 1986년 호주에서 시작된 '씨앗을 지키는 네트워크'(Seed Savers Network)는 38개 국가의 씨앗 보존 조직을 지원하는 국제적 단체로 씨앗은행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올해 4월 그리스에서 제 12회 세계 씨앗의 날을 개최하여 유럽 차원에서 대규모 씨앗 교환 행사와 함께 농부권 및 텃밭작물 판매권 등의 정책을 제안함.
-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Seed Savers Exchange)이 만들어져 재래종 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을 펼쳐 왔으며, 1999년 설립된 바질(The Bay Area Seed Interchange Library, BASIL)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무상으로 씨앗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씨앗도서관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함.
- 씨앗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재래종의 보존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먹거리 주권과 생물 다양성을 지켜가고자 하는 씨앗도서관은 현재 미국 전역에 약 45개가 운영 중이고 5개가 준비 중이며, 비교적 설립이 쉬운 관계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 지난 7월에 개국한 인터넷 씨앗 방송국은 미국 각지의 씨앗도서관 이야기와 텃밭 농부, 농업, 씨앗 주권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씨앗 보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들어 농작물의 다양성과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보존,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제주도에서 씨앗도서관을 표방한 활동들이 시작되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씨앗은행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제주도는 제주 여성농민회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제주도 토종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제주도의 조례 제정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토종 농작물의 보호육성,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식품안전성 실현, 지역순환형 먹거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한편, 토종종자와 전통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씨드림'은 4천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씨앗을 교환하고 있으며, 흙살림 토종연구소는 서울 노들뚝밭에 토종종자를 심어서 도시민들에게 소개하였고, 도시농업네트워크도 토종종자 관련 강좌와 무료 나눔을 진행하고 있음.
-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들은 일부 품목에 토종 먹거리를 취급함으로써 토종 종자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최근 21차 녹색성장위원회의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OECD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 민간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신탁운동을 펼치고, 1社 1자생종 키우기 캠페인을 전개해 2015년까지 정기 기부자 10만명, 연간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모으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음.

분야별 동향 2

경제 · 생활

● 0세 보육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7개월 만에 사실상 중단 되면서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소득 30% 가구를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등의 개편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 기존의 전면 무상보육 제도는 출산율 저하 및 양육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마련되었으나 각 지자체의 재정 고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발생함.
- 또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양육수당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0~2세의 영아들을 기관에 맡기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한 커져 왔음.
- 실제로 지난해 보육시설을 이용한 0~2세 영유아 수가 65만 명에서 올해 78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3위에 해당함. 만 2세 이하 영아 시설 이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덴마크, 스웨덴 두 나라로, 이들 나라의 모(母) 취업률은 각각 72%, 76.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9.9%로 나타남.
- 관련 규정 상 0세아의 경우 교사 1인당 3명, 1~2세는 5명, 3~4세의 경우 15명, 4세 이상은 20명을 돌보도록 되어 있음(서울시 기준). 하지만 시설 및 교사 수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못해 영유아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등 관련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음.
-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6세 미만 소아의 65.3%가 호흡기 계통 질병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호흡기 면역력이 약한 소아들이 어린 나이에 집단생활을 하면서 먼지나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 됨.

-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

- 현재 정부는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소득 상위 30%를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0~2세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아기의 경우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아

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설에 맡기는 방식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제고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가정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and 정책적 뒷받침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 노동을 활성화 시켜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생협전국협의회 구성 및 활동 소식

- 생협간 연대 조직으로서 생협전국협의회를 구성.

- 생협 제 단체는 생협법에 근거한 생협전국연합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1년에 생협전국연합회발기인회를 결성해 생협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 논의해 옴.
- 하지만 전체 생협 법인의 50%가 항상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생협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인가 유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생협전국연합회발기인회를 올해 1월 제7차 발기인회를 통해 해산을 결정함.
- 이후 동 회의에서 생협간 연대 및 대정부 창구 등의 역할을 위한 연대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협의회(생협전국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단체 역할은 생협 단체에서 순환하여 맡기로 하여 2012년 한살림연합이 대표단체 역할을 맡고 있음.
- 현재 한살림연합(회원조합 20곳),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6곳), 두레생협연합회(26곳), 한국의료생협연합회(16곳), 한국대학생협연합회(25곳),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73곳), 지역생협협의회(한울생협, 인드라마생협, 정농생협, 생명의공동체, 푸른평화, 부산YWCA생협, 부산노동자생협, 부산생협), 농도생협, 교육생협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생산자생협 등으로 총 6곳의 생협연합회와 11곳의 지역생협이 생협전국협의회에 가입해 있음.

- 현재 생협전국협의회는 생협간 연대활동, 대정부 창구 업무, 생협에 대한 정기 통계조사, 생협법 개정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생협전국협의회는 생협 단체 대표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간 간담회(3월 7일)를 진행하여 생협의 활성화 방안 건의와 생협단체와 공정위의 업무협조 진행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후 간담회 결정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확인 및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생협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 마련 논의와 타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생협 활성화를 제한하는 세제법 개선 요구활동, 공정위에 대해 공제사업 진행 사항 확인과 협조, 영리추구형 의료생협과 같은 유사생협의 관리 감독과 설립 규제에 대한 제안과 점검의 요구를 진행하고 있음.

● ‘프리미엄’ 유기농 매장의 차별화, 고급화 전략이 주는 의미

- 최근 들어 대형 유통자본들이 유기농 시장에서 차별화, 고급화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유기농 매장을 개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난 7월에 문을 연 신세계푸드마켓 청담점은 ‘최고급’을 표방하며 자연방사 해서 키우는 닭이 당일 아침에 낳은 달걀과 국내 명인이 만든 된장, 프랑스에서 공수한 유기농 치즈 등을 취급하면서 일반 마트나 백화점은 물론 타 유기농매장과도 확연히 차별화된 컨셉을 갖고 새로운 소비층 공략에 나서고 있음.
- 갤러리아백화점 역시 새로운 형태의 ‘푸드 부티크’ 컨셉의 식품관 ‘고메이 옴포리움’을 다음달 초 ‘고메이 494’라는 이름으로 재 오픈할 예정임. 여기서는 최고급 식자재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매장 옆에 레스토랑을 배치해 구매한 음식을 즉석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싱글족, 핵가족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농산물물을 세척, 손질하고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컷앤베이크(Cut&Bake)’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대형 유통자본들의 유기농 시장에 대한 개입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생협의 정체성을 살린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7조원이었던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2015년에 5.3조원 규모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제적 침체기에 유기농 시장은 대형 유통자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한살림과 아이쿱 등 대표 생협들은 스스로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유기농 사업 매장의 성장률도 상당히 높은 편임. 초록마을의 경우 매년 약 30%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올가홀푸드’ 역시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가운데 유기농 식품을 고급 브랜드화 하여 소수의 고정 구매층을 확보하려는 프리미엄 식품 매장의 등장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음.
- 고급 브랜드화 된 유기농 식품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인식될 경우, 그동안 생협 단체들이 유기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통해 구축해 온 사회적 역할과 의미마저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생협들은 물품 자체의 차별성 못지않게 생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활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물품 개발과 이용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사업과 활동의 기반을 확장해 나가는 데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동향 3 사회 · 환경

● GMO 관련 과학계의 실험과 안전성 논란 및 과제⁴⁾

- 최근에 발표된 과학논문 두 편이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세계적으로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들 각각의 논문은 모두가 '생체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한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GMO가 위험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논문은 안전성 판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감행한 후 'GMO는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처럼 GM 식품의 안전성과 이런 작물을 보급한 생명공학 기업 및 정부의 안전성 보증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GMO 관련 기술의 동향과 산업화 실태에 대해 소비자 단체, 과학기술 및 정보운동 단체, 생협, 언론 등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함.
- 9월 초 프랑스의 한 연구진이 GMO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연구 결과를 미국의 전문학술지 「식품과 화학독성학」에 발표함.
- 프랑스 캉대학 연구진이 쥐를 대상으로 최초로 평생 추적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몬산토 사의 제초제(라운드업)에 내성을 갖도록 만든 GM 옥수수 '라운드업-레디'(NK603) 작물을 쥐에게 먹이면서 신체 기능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이것을 먹은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유선 종양과 간 및 신장 손상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함.
- GMO의 동물실험은 최대 90일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GMO 개발자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각국 정부에 안전성 승인 심사를 요청하는데, 이번에 프랑스 연구진은 쥐의 평균 수명기간인 2년에 걸쳐 몸 상태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GMO의 안전성에 대해 공식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 실험 결과 암컷이 수컷에 비해 이상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종양이 나타난 시기도 빠르고 크기도 훨씬 더 컸으며, 조기 사망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실험결과가 세계적으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험에 사용된 GM 옥수수 NK603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정부는 NK603을 포함해 GM 옥수수 16개 품목의 수입을 승인해 왔음.
- GM 옥수수 NK603은 우리나라가 2002년에 식용(2004년 사료용)으로 수입을 승인

4) 김훈기(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한 품목으로,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식생활 속에 깊이 자리해 왔음.

- 따라서 승인을 받은 GMO가 이번 실험결과처럼 이후에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하지만 GMO를 찬성하는 과학계와 산업계의 영향력이 상당하여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 한편, 일명 황금미(Golden Rice)라고 불리는 GM 쌀의 임상시험을 미국의 한 연구진이 중국 후난성 형양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지난 8월 「미국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사건이 발생함.

- GM 쌀로서 황금미는 비타민A를 만드는 물질인 베타카로틴의 유전자를 함유하도록 쌀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으로, 쌀을 섭취하면 동시에 인체에 부족한 비타민A도 보충되도록 하는 만든 것임.
- 그런데 미국 연구진은 황금미가 실제로 인체에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6~8세 어린이 6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연구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함.
- 하지만 이 실험은 GMO 자체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음. 연구자들은 관련 기관과 실험에 참여한 어린이들 및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든 것이 불명확하여 연구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이런 사실에 대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GM 쌀을 개발하고 있는 두 개의 연구기관이 포진하고 있는 필리핀의 어린이가 다음번 생체 실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일본 생활클럽생협연합회의 '방사능 자주기준' 설정과 운영

- 일본 생활클럽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 방사능오염에 관한 '자주기준'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운영해 옴.
- 4월 1일부터 정부(일본)가 새로운 방사능안전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이와 병행해 잠정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새롭게 추가, 보강한 것임.

정부(일본) 기준치		생활클럽 자주기준치	
식품구분	기준치(Bq/kg)	식품 구분	기준치(Bq/kg)
음료수	10	음료수	10
우유	50	우유(원유), 유제품(1)	
유아용 식품	50	유아용 식품	

일반식품	100	쌀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20
		유제품(2), 채소류, 생선류, 가공식품	50
		버섯류	100

자료: 생활클럽생협연합회 홈페이지(<http://seikatsuclub.coop/>)

참고: 유제품(1)은 생활클럽의자회사인 신세이낙농(주)의 우유를 원료로 하는 요르트나 아이스크림, 생크림 등.

유제품(2)는 다른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나 버터류.

- 생활클럽생협연합회는 '방사능 피폭량에 안전 수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방사능 피폭 제로'가 이미 실현 불가능해 진 현실을 직시하여, 뜻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협력해서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자주기준을 만들어 방사능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옴.

- 보다 강화된 자주기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간 협력과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함.

- 4월부터 새롭게 정한 국가 기준치가 식품의 내부 피폭만을 상정했다면, 생활클럽은 내외부 피폭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설정함.
- 특히 주식인 쌀을 비롯해 우유와 계란, 육류 등 먹는 횟수와 양이 많은 식품의 기준치를 더 강화시키고자 했음.
- 자주기준치는 그동안 생활클럽에서 자주검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 자료에 근거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마련한 것으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다양한 종류의 식품 샘플을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체제가 필요함.
- 생활클럽은 작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부터 취급하는 모든 식품을 검사해 왔으며, 올해 7월말 기준 25,363건으로 정부(지자체)가 그동안 검사한 양의 16%에 달함.
- 생활클럽은 방사능오염에 있어 소비자 개개인의 최종 판단이 제3자에 의한 안전 보증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철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공식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검출유무뿐만 아니라 측정치와 검출 하한치를 실제 숫자로 공개하고 있음.
- 한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는 생산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자주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검체 제공, 정보공개, 기준 초과 물품의 공급중단 등 생산자들의 자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생활클럽생협은 원전사고와 방사능오염 문제가 국내 식량생산의 기반과 생산자들의 생산 의욕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생산자와 공동으로 오염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주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 공급 중지로 인해 발생할 생산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를 검토 중에 있음.

● 생수 시장의 과열과 물 기본권에 대한 위협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생수 시장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먹는 물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 생수 매출은 위기상황에서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해 여름 녹조 확산의 여파로 국내 생수 매출이 급증세를 보였으며,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한 바 있음.
-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사태로 일본 내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제주산 생수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음.
- 현재 국내 생수시장은 70개 업체, 100여 개 브랜드로 크게 늘었으며, 수원지도 한라산에서 비무장지대까지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임.
- 제주 삼다수의 경우 1998년 출시 이후 14년 간 국내 먹는 샘물 페트병 시장 점유율 1위에 50%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만 61만 9천 톤을 판매해 출시 첫해 대비 9배 증가한 규모를 보임.
- 최근에는 일부 생수가 피부미용과 다이어트 등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으로 변모해 일반 생수 성장률(10%) 보다 더 높은(20~30%)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친환경을 표방한 일부 업체에서도 생수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생수 시장의 과열로 인한 생태적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생수 공급을 위한 취수량 증산 과정에서 공공재로서 지하수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물이 산업과 소비재 상품으로 개발되면서 공공재적 성격을 잃어버려 소득격차에 따른 공급의 불평등성을 낳고 있고, 수돗물이 마실 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생명 활동의 기본 요소인 물에 대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이 돈벌이를 위한 상품으로 개발되고 이용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가운데 초록마을은 지난 6월 '청정 해양심층수'를 표방하는 '초록마을 순수바다'를 출시하고 있으며, 일부 생협에서 생수를 생협 물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분야별 동향 4

정치 · 사회운동

● 원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핵운동

-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원전의 잦은 고장과 부실 관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음.
- 지난 10월 2일 원전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가 2시간 간격으로 한꺼번에 고장을 일으켜 발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올해 들어 사고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것이 벌써 7번째로, 해가 갈수록 고장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010년에 2건, 2011년에 7건이던 것이 올해는 지금까지 벌써 7건이 발생함.
- 문제는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장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오히려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 원전의 특성상 고장을 제때 막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거나 '새로 지어진 원전 시설의 경우 일정 기간 적응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을 개선하면 안정화 된다'는 등의 한수원 관계자의 말이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여기에도 가장 안전을 담보해야 할 원전 관리의 책임 주체인 한수원은 지난 2월 고리 1호기의 정전사실을 은폐한 데 이어, 원전 부품의 납품비리와 직원의 마약투여 사실 등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임.
- 이런 가운데 핵 전문가인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는 "한국 원전들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최근에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원전이 안전에 문제가 발견되어 시급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탈원전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AFP 통신은 10월 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유럽 18개국의 원자로 143기(134기 가동 중)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내구성 진단'(스트레스 테스트)을 벌인 결과 안전상 개선점 수백 개가 발견됐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억유로(14조3000억원)에서 250억유로(35조9000억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함.
- 보고서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던 해일 같은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원전의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3단계에 걸쳐 검토한 결과 "사실상 유럽의 모든 원전의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국에 2015년까지 지적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 4일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18~1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임.

-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견된 나라는 유럽 제일의 원전 대국인 프랑스로, 가동중인 원자로 58기 대부분에서 대규모 홍수와 지진에 대비한 안전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 녹색당 소속의 레베카 하름스 유럽의회 의원은 영국 BBC 방송에서 “유럽 집행위는 안전하지 않거나 노후한 원자로의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며, “적어도 안전상의 결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우리나라는 노후 원전 폐쇄 요구와 재가동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탈원전, 탈핵운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음.

- 지난 9월 2일 대구경북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대구경북탈핵연대’를 발족하고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탈핵기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임. 또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요구’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즉각 폐쇄, 영덕과 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중단, 청도와 밀양 등지의 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정의로운 에너지정책 수립과 탈핵기본법 제정 등 네 가지 사항을 밝힘.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8월 22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탈핵 무한도전 캠프’를 차리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 참여를 적극 이끌어낼 수 있는 강좌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부산지역 구,군 의원모임도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탈핵에너지전환 의정활동 행동강령21’의 초안을 마련해 출범과 함께 정식 강령으로 채택할 예정임.
- 한편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책임론 또한 제기되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32명으로 구성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달 18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핵 사회를 위한 10법 입법 과제를 발표함. 이는 원전 의존형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계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종교계의 움직임 또한 계속되고 있음. ‘핵없는세상을위한범종교생명평화순례단’은 지난 8월 핵발전 중단을 외치며 3박4일간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부터강원 삼척까지 순례를 마치고 범종교 선언문을 발표했음. 순례에 참여한 5개 종단 7개 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은 정부의 핵에너지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탈핵을 위해 종교인들의 힘을 모으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음.
- 또한 불교생명윤리협회는 9월 중 탈원전좌담회 및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탈핵,탈원전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천주교주교회의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열리는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탈핵과 탈원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한편, 오는 10월 20일에는 '바람과 태양의 나라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핵없는 사회를 원하는 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전국 각 지역에서 탈핵활동을 해 온 단체들과 생협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이 이날 행사에 함께할 예정임.

● 두물머리의 갈등 해결과 남은 과제

- 4대강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한 남한강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지키기 위한 오랜 싸움이 종교계의 중재로 생태학습장을 만드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일단락 됨.

- 유기농지를 자전거도로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이것을 지키고자 싸워 온 농민과 활동가, 시민들이 합의한 생태학습장은 영국 라이턴 정원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세레스 공원 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후 민간협의기구를 꾸려서 추진하기로 함.
- 이번 두물머리 싸움은 현지 농민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환경단체, 생협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 개개인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를 막아내고 결국 합의까지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유기농업의 중요성을 보다 가까이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낼 수 있었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농지가 각종 개발 바람에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두물머리 또한 향후 대안 개발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실정임.

- 이번 두물머리를 둘러싼 갈등의 중재를 주도한 이용훈 주교 등은 생태학습장 안에 일정 규모의 유기농 재배지를 남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경작 행위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사회 전체적으로는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강제수용된 농지가 정부 추산치를 토대로 최소 2만6천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 규모를 농가당 농지 면적(1.45헥타르)으로 환산할 경우 총 1만8000농가에 해당하는 면적임. 하지만 정부는 물론 사회의 관심은 4대강 유역의 상업적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에 쏠려 있는 실정임.
- 이런 가운데 2012년 상반기 동안에만 개발사업 등 다른 용도로 전용돼 없어진 농지 면적이 7,018헥타르에 이르며, 지자체에 농지전용 허가 권한 위임이 확대되면서 농지 전용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식량위기와 곡물파동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생협단체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귀농에서 협동조합까지, 청년들의 새로운 모색

- (사)귀농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청년 100일 귀농학교가 지난 6월에 시작해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 중에 있음.

· 귀농에 관심을 둔 청년들이 귀농운동본부가 추천하는 전국 10개 농가에 10일씩 머무르며 농사일을 돕고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경북 상주에서 시작해 충북 괴산, 홍성, 전북 장수, 전남 해남, 경북 청송, 강원 화천 등을 돌며 일정을 이어가고 있음.

· 다채로운 직업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모여 농사뿐 아니라 시골살이에 필요한 기술과 마음가짐 등을 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배움과 교류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음.

- 지난 8월 25~26일에는 전남 장수 논실마을학교에서 7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귀농한마당 '시골이 왔다'가 열렸음.

·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데 모여 어울리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로, 포럼, 사람책,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고 선배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시골살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까지 오간 시간이었음. 귀농에 대한 청년들의 드높은 관심과 청년귀농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음.

- 한편, 지난 7월에는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성공회대 COOPY의 주최로 청년협동조합컨퍼런스가 열림.

·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에 대해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사례와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 등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 이틀의 행사에 총 3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음.

· 이 밖에도 여러 공부모임, 현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거나 관심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 청년 실업, 88만원세대 등으로 표현되는 이 시대 청년들의 현실과 협동조합을 둘러싼 세간의 열기가 청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만드는 대안적 경제조직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음.

· 일시적인 '붐'으로 그치지 않고 건강한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치의 측면에 더하여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교내 생협의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2년 넘게 갈등을 겪어 온 세종대학교와 세종대 생협이 합의를 함으로써 퇴출 위기에 있던 세종대 생협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짐.

· 학교 측은 생협이 운영해 온 교내 자판기와 일부 매장을 양도 받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생협이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오랜 시간 논란이 되었던 세종대 생협 사태는 일단락됨.

· 현재 국내 총 30개 대학생협이 운영 중이며(국립 18개, 사립 12개), 교내 생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강대, 성공회대 등에서도 현재 생협추진위 혹은 준

비모임을 꾸려 설립을 준비 중임.

● 2012 생명평화대행진, 생명운동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까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명평화의 눈으로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생명평화대행진을 약 한 달간 진행.

- 하반기 들어서 사회의 모든 이목이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관심과 기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사회적 현안들을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새롭게 환기시키기 위해 10월 5일(금) 부터 11월 3일(토)까지 4주 동안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무대로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함.
-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강제철거금지, 4대강 사업 저지, 핵 발전 중단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배제되고 소외된 이 땅의 '하늘님'들을 만나고자 합니다"라는 행사 취지문처럼 이번 생명평화대행진은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생명평화를 위태롭게 해왔던 일들을 멈추게 하고, 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상처와 갈등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획됨.
- 해고자와 가족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사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6년간의 갈등으로 생태계는 물론 지역공동체 전체가 위기 놓인 제주 강정마을 사태, 철거민 5명, 진압경찰 1명 등 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재개발 참사 등과 관련해 활동해 오던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이번 행사를 기획, 제안하게 됨.
- 이들은 지난 6월 쌍용(S), 강정(K), 용산(Y)의 앞 글자를 따서 'SKY 공동행동'을 출범시키고, 개발과 경쟁, 폭력을 앞세운 돈 중심의 사회를 생명, 연대, 평화의 가치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꿔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늘이다'라는 주제의 생명평화대행진 기획하게 됨.

-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함께 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라는 구호를 가지고 펼쳐질 생명평화대행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0월 4일(강정-전야제), 5일(제주), 6일(목포, 광주), 7일(순천), 8일(보성, 벌교), 9일(공주), 10일(대전), 11일(마산, 창원), 12일(밀양, 고리), 13일(김해), 14일(울산), 15일(구미), 16일(대구), 17일(부산), 18일(전주), 19, 20일(남원 실상사), 21일(군산), 22일(청주), 23일(문경, 괴산), 24일(삼척, 동해), 25일(춘천, 홍천), 26일(원주), 27일(평택), 28일(평택-만민공동회), 29일(평택->오산), 30일(오산->수원), 31일(수원->안산), 11월 1일(안산->인천), 2일(인천->부천->영등포->여의도), 3일(여의도->용산->서울시청광장)
- 대행진 중간 중간에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 단체들과 공동행사를 진행하며, 대행진 기간 동안 매일 오전과 오후에는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저녁 시간에는 문화행사를 할 계획임. 특히 10월 28일에는 평택에서 각계인사와 단체들이 함께 만

민공동회(民會)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생명평화대행진이 가진 특성과 의미를 잘 살려서 생명평화가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말이 되도록 생협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번 행사는 노동, 평화, 주거, 개발, 생태계, 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생명평화'를 중심 가치로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 따라서 종교 단체, 노동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생명운동단체 등이 함께 함으로써 여느 때 보다 연대의 폭이 넓고 다양한 것이 특징임.
- 이번 행사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제주 해군기지건설 백지화, 강제철거 금지와 주거생존권 보장, 4대강 개발사업 중단과 생태적 복원, 골프장건설 중단과 농지 보전,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비주류로 취급받는 것들을 되살려내서 각 지역별로 아래로부터 지혜와 실천력을 모아내는 것이 특징임.
-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긴 호흡으로 사회문화적 바탕을 새롭게 바꿔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선거정치를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흐름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대행진과 민회 등을 통해 밑바닥 현장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아내는 길거리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험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살 · 림 · 의 · 말

한살림,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

- '생명의 눈'으로 본 한살림 협동운동의 특징 -

협동조합이 뜨고 있습니다.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만큼은 아니지만 방방곡곡 요란합니다. 현대 한국협동운동의 선구자인 한살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살림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합니다. "왜 '한살림생협' 아니라 그냥 '한살림'이라고만 부르나요? 생협이 아니었던가요?" 협동조합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좀 더 진지하게 묻습니다. "한살림은 '협동'운동을 하는 건가요? '협동조합'운동을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들립니다. "한살림은 생명운동을 표방하고 있는데 협동조합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 마디로 말하면 한살림 협동운동의 성격과 특징, 즉 '한살림스타일'을 묻고 있는 셈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한살림운동은 곧 협동운동입니다. '한살림'이라는 말 자체가 협동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는 살림살이." 그리고 전국 20개 지역조직의 법인격은 협동조합법인입니다(생산자공동체의 조직형태는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한살림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보통의 협동조합의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 '경제적 편익'의 관점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한살림스타일 ? !

한살림스타일은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질문과 답변을 거듭하며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오늘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해야 할까?
- 왜 직거래를 유난히 앞세울까?
- 왜 처음부터 유기농이었을까?
- 왜 협동조합을 강조하지 않을까?
- 왜 거창하게 문명을 이야기할까?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한살림의 전사(前史)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한살림의 모습 아래 깊은 땅 속 굵고 단단한 뿌리가 있을 터이니까요.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85년에 원주의 소비자협동조합이, 1986년 서울에 한살림농산이 설립되기 훨씬 전, 1970년대 강원도에서는 다양한 협동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故장일순 선생님과 故박재일 회장님, 그리고 무위당만인회 김영주 회장님을 비롯한

한살림운동의 대선배님들은 광산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용협동, 생산협동, 구매협동 등 여러 가지 협동사업을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용협동조합을 빼놓고는 실패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탄광산업의 쇠퇴, 이농현상, 정치적 탄압 등이었지만,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협동운동의 한계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새로운 탐색의 결과로 나온 문건이 1982년에 발표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었습니다. '원주보고서'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이 문건에서 선배님들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유물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며,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영성을 지닌 살아있는 한 생명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사회운동에서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생명세계'라는 깨달음은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끼리끼리 협동'에서 '서로서로 협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요새 말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넘어서는 협동운동의 차원변화가 시작됩니다. 농민은 농민끼리 광부는 광부끼리, 소비자운동 따로 생산자운동 따로, 각 조합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 경쟁하는 협동운동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살리는 협동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협동은 전 세계 모든 협동운동가들의 오랜 이상(理想)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30여 년 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최근의 협동조합 언어로 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인 셈입니다.)

한살림, 새로운 협동을 말하다

이렇듯 이 세상과 사회운동과 협동조합을 생명의 눈으로 성찰하게 되면서 협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스타일'의 협동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생산·소비 협동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살림운동은 끼리끼리 협동에서 서로서로 협동으로, 협동의 확장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한살림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생산·소비 공동참여형 협동조합'인 셈입니다.

둘째, 호혜적 도농직거래로 상품시장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도농직거래와 협동조합을 통해서 시장경쟁원리를 극복한다." 초대 한살림생산자협의회 회장을 맡았던故김영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직거래의 심화입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값싸게 가져와 탄광지역에 파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점으로 본 직거래의 진정한 의미는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교환'을 넘어서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호혜'의 관계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사고팔기(교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라면 주고받기(호혜)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비록 화폐를 매개로 하기는 하지만,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밥/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중간마진의 배제를

통한 가격인하라는 경제효과를 넘어서, 기존 쌀 가격의 두 배를 주고서라도 밥상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목숨과 땅을 살리겠다는 여성 소비자의 깊은 마음이 도농직거래의 차원을 바꾸었습니다.

셋째, 유기농업, 생명의 먹을거리입니다.

생명의 눈, 모심의 눈을 뜨게 되면서 '밥/쌀' 안에 들어있는 농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농약중독으로 죽어가는 농민들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먹을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도시소비자에게 줄 쌀에도 절대 농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한살림의 무농약·유기 생산정책은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먹을거리는 비료와 농약을 고리로 한국 농업을 장악한 지구식량시스템을 넘어서는 변혁의 무기가 됩니다.

넷째, 다양한 협동조직을 넘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와 두레와 같은 전통적인 협동조직과 품앗이와 같은 협동시스템이 있었지만, 서유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생활을 함께 하는 협동공동체 코뮌,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제(共濟, mutual aid)조직, 노동자자주관리조직 등등. 협동조합(cooperative)도 여러 가지 협동조직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세계의 그것처럼 협동조직도 시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살림의 입장에서 경제적 편익 중심의 전통적 협동조직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형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한살림 협동운동 과정에서 크게 세 번에 걸친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직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한살림농산>이라는 조그만 가게로 문을 열었다가, 1988년 서울지역에서는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공식적인 협동조합 법인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단법인 소협중앙회 지회로서 매우 기형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1994년 <사단법인 한살림>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의 롤 모델은 일본의 도농직거래 비영리법인인 <대지를 지키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 안에 주식회사 형태의 물류회사를 두어 회원제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법인이 아닌 협동운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생협법이 제정된 후 2002년 <한살림고양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면서 생협 법인 시대가 시작됩니다.

요컨대 한살림 협동운동은 안팎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조직형태를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향후 한국 협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직/법인 형태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오히려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때문에 한번 조직형태가 만들어지면 환골탈태 없이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사회운동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다섯째, 문명사적 관점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과거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적 모순의 근본원인이 경제체제에 있다고 보았고,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정권교체를 통해 삶과 사회의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는 산업·자본주의 문명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계를 비롯한 인간 이외의 존재를 약탈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문명, 기후붕괴와 핵기술로 지구생명공동체의 절멸을 재촉하는 문명, 삶의 중심가치가 화폐·물질로 내면화된 문명에서는 절망뿐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즉 전면적인 전환만이 희망입니다. 문명사적 전환기 변혁적 협동운동을 탐색해야 할 일입니다. 그 변혁의 동력은 더 이상 생산력이나 계급투쟁이 아닙니다. 변혁적 협동운동의 새로운 동력은 호혜의 마음, 생명의 마음, 모심의 마음 아닐까요?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을 위하여

한살림 협동운동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 혹은 특징을 관통하는 열쇠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살아있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세계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권력자나 백성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나아가 풀과 나무와 돌맹이마저도 하늘같은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밥 한 그릇 안에 생명세계가 보이고 단호박 한 알에서 농민들의 시름을 느낍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 안에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이끌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리적 소비'도 훌륭합니다만, 한살림은 진정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물론 한살림에도 아쉬운 점도 있고 바뀌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살림 협동운동에 대한 평가 보다는 '생명'의 눈으로 한살림 협동운동이 가진 의미를 성찰하고 확인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4호

발행일 2012년 10월 8일

발행인 박맹수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